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의
의의와 과제
2~3면

임금 격차, 왜 벌어지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4면

임금 인상 요구 연쇄 확산
9면

트럼프 vs 쿠바
10~12면



이재명 정부 1년
모자라고 보수적인
정치적 실용주의 5~8면

노동자

임금 인상

투쟁을

지지하라

관련 기사 9, 2~4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의 의의와 과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 위협은 지배자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정선영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인상 투쟁은 지난 한 달여간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 파업에 들어갔다면 더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파업 예고만으로도 지배자들을 큰 걱정케 했다. 노동자 투쟁을 잠시 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게 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2024년에 첫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당시는 2023년 반도체 산업 불황 직후라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은 25일간 파업을 이어 갔다. 삼성전자 최초 파업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지만 분명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파업을 접었다.

이번 투쟁은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세계적인 AI 붐으로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엄청나게 커진 시점이었기에 이번 투쟁은 2024년에 비해 파급력이 훨씬 컸다.

게다가 2024년에는 파업 참가 규모가 수천 명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5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영업이익의 10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따낸 것을 보며 삼성전자에서도 노조 가입 물결이 일어났다. SK하이닉스는 생산

직의 노조 조직률이 90퍼센트가 넘는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자신들도 임금을 대폭 올리려면 노조에 가입해 단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삼성그룹 초기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노조) 가입이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 6,000명이던 조합원 수는 올해 7만여 명으로 늘었다. 전국삼성전자노조와 합치면 9만 명이 노조에 가입한 셈이다.(삼성전자 임직원은 12만 8,000명이다) 반도체 부문 노동자 조직률은 80퍼센트가 넘는다.

이와 같은 노조 가입은 그간 회사 측이 보인 이윤배반적 행태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결과다. 지금까지 삼성은 무노조 경영의 대가로 '총보상 상위 정책'을 써 왔다.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보상은 확실히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회사는 약속과 달리 노동자들을 홀대했다.

2023년 반도체 부문이 적자를 기록했을 때 경영진은 수천억 원의 보너스를 받아 가면서도 직원들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 호경기인 지금도 성과급 상한제를 유지하며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적은 성과급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이와 같은 사용자 측의 노동자 무시

에 대한 반감이 노조 조직화로 이어졌다. 물론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를 억누르려 했다. 일부 노동자가 조합 가입을 설득하고자 비조합원 명단을 작성한 것을 두고 사용자 측은 얼토당토않게 “노조 판 블랙리스트”라며 고소했다. 대다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비조합원에게 조합 가입을 설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다. 잠정 합의 이후 사용자 측은 관련 고소를 취하했다.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노동자의 힘

이처럼, 이윤 파괴력이 크고 대규모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자 지배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4월 23일 평택 공장 앞에 노동자 4만 명이 참가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집회가 열렸다. 단 하루 집회만으로도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량은 58퍼센트, 메모리 생산량은 18퍼센트 감소했다.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면 하루에 1조 원씩 손실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뒤집어 말하면, 이는 노동자들이 그

동안 얼마나 착취당해 왔는지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각종 산재 위협과 성과 압박 속에서 3교대로 밤낮없이 일하며 막대한 부를 생산해 왔다.

파업으로 이를 멈추고 이윤에 타격을 가한다면, 결정적인 잠재력이 노동자들에게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언론, 사용자는 반도체 노동자 파업이 “국가 경제”를 뒤흔든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연일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에 대서특필됐다.

한국 지배자들만 노동자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국제 자본가들까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든다며 가세했다.

법원은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며 파업권을 제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양쪽을 강하게 압박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해 왔지만,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 “선을 넘는다” 하며 비난을 삼가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막판에 중재에 나서며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너무나 부족했던 연대

이처럼 지배계급은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 총공세를 쏟아부었다. 반면 노동계급 측의 연대는 너무나 부족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급 개혁주의 지도부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비판 성명을 냈지만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지지하며 연대하기 위한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연대를 밝히지 않았다. 진보당은 “초과이익공유

제” 등 파업 참가 준비 중인 노동자들의 요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업 문제가 초미의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였다.

이들 개혁주의 지도부는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지지했다가 국가 경쟁력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러워했다. 얼마 전까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더니, 막상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노

조를 결성하고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자 뒷걸음질 친 것이다.

노동전선, 노동자투쟁, 노정협, 노동자연대 등과 임승수·김기덕 등 일부 사회주의자 개인들은 삼성전자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나머지 좌파들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이미 고임금을 받고 있다며 그들의 임금 투쟁을 마땅치 않아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임

금에 비해 많다고 해서 착취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고도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많은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들도 자신이 생산한 부의 상당 부분을 착취당한다(그게 이윤의 원천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특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빼앗긴 몫의 일부를 되찾으려는 기초적인 계급투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진 제공 삼성전자인사노동조합공공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은 다른 호경기 산업의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효과를 냈다

요구가 없다며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착취에 맞서 노동자의 몫을 늘리기 위한 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부 좌파는 산별 노조·산별교섭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노조 조직 형태 변화만으로 자연스럽게 연대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사실 민주노총 산하 정규직 노조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노조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는 일상적인 시기의 노동조합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한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조직이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약점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노조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내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융합돼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가 시장 교환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자본가와 자본가 사이,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법적·형식적 평등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노조가 이런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조는 부문주의적 약점도 갖게 된다. 전체 노동계급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 투쟁은 정당에게 맡기고, 노조는 자신의 사용자에 맞서 자기 조합원의 조건을 지키는 경향이 자란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분리, 노조의 부문주의는 노조 상근 간부층의 형성으로 더욱 강화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를 중재하는 전문적인 관료층이 자라나기 마련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협

상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핵심이라고 여기고 또 노조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투쟁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여긴다. 이런 한계 때문에 노조가 정치 투쟁을 벌이며, 전체 노동계급을 단결시키는 효과적인 조직은 못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지배자들의 정치·경제 권력에 맞서며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혁명적 시기에는 노동계급 전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전혀 새로운 조직, 즉 평의회(소비에트)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부문주의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시기에 노동자 연대는 노동조합의 부문주의적 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혁명적 좌파의 노력을 통해서만 일관되게 추구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계급 투쟁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계급의식이 성장하면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커진다.

따라서 좌파는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조건 없이 지지하며, 그 속에서 투쟁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했어야 했다.

임금 대폭 인상

온갖 공격에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 파업을 압박해 상당한 임금 인상을 얻어 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은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2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거센 공격과 부족한 연대로 인해, 노동자들이 요구한 바를 모두 이루지는 못했다. 삼성 노동자들은 애초 SK하이닉스처럼 조건 없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앞으로 3년간은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기록했을 때, 그 이후에는 100조 원을 기록했을 때에 한해

특별 성과급을 받기로 합의했다. 당장은 호황이라 기준을 충족하겠지만, 호황과 불황의 격차가 심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올해와 같은 보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애초에 노조는 반도체 부문 중에서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같은 적자 부문에도 성과급을 상당 부분 분배하라고 요구했다. 성과주의 경쟁을 완화하고자 하는 옳은 취지였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성과주의를 강경하게 고수했다. 애석하게도 노동조합이 타협한 결과, 반도체 적자 부문이 받는 성과급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불행히도 이 격차는 내년에도 더 벌어지게 돼 있다.

또한 비반도체(DX) 부문 노동자들에게는 불행히도 성과급이 분배되지 않는다. 언론은 DX 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을 특별히 부각하며 투쟁에 힘을 내고 있다.

이는 향후 노동조합이 부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높여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이번 투쟁은 불황기에도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위해 임금을 인상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귀족 노동자”라며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다른 부문 노동자의 처지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은 착취에 맞선 싸움이었기에 다른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효과를 냈다.

친기업 언론들은 조선, 통신, 플랫폼 산업의 여러 기업에서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가 나온다며 우려한다.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사이에서도 성과급 인상 요구가 잇따른다. 올해 1분기 26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낸 대만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에서도 “삼성전자처럼 파업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나눔의 연대가 아니라 투쟁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번 잠정합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은 삼성전자 노동자가 얻은 성과를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청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과 노동강도가 강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며 이득을 취한 쪽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용자다. 설사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몫을 양보한다 해도 그걸 어디에 사용할지 정하는 것은 사용자다.

노동자들 내에서 파이를 나누라고 강조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다른 노동자들도 사용자 측에 맞서 더 많은 몫을 따내러 싸우고, 노조 지도자들은 그걸 지지하는 것이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6·3 지방선거
이중 플레이하는 국힘,
투표 의욕 떨어뜨리는 민주당
- ★ 실용주의 정치는 실용주의 철학의 통속화
실용주의 철학 비판:
존 듀이의 결정판을 중심으로
- ★ AI, 치명적인 신(新) 군비 경쟁
- ★ 독자편지 금융기관의 문턱에서
또다시 차별받는 이주민들

임금 격차는 왜 벌어지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5월 20일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투쟁 이후, 실적이 좋은 대기업과 하청·협력 업체의 노조도 성과급 배분(임금 인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노조가 없는 대만 TSMC에서도 삼성전자처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는 보도도 잇따른다.

삼성전자 투쟁을 지지한 극소수 좌파들이 기대한 효과다. 반면, 삼성전자 투쟁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던 국내의 사용자들은 걱정이 많다.

노동운동 안에는 이번 투쟁을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적잖다. 민주노총은 잠정 합의 다음날, 삼성의 초과이익을 노조가 독식하면 안 된다며 연대 전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삼성전자 투쟁을 지지하지도 연대하지도 않았으니, 이는 노동운동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나쁜 태도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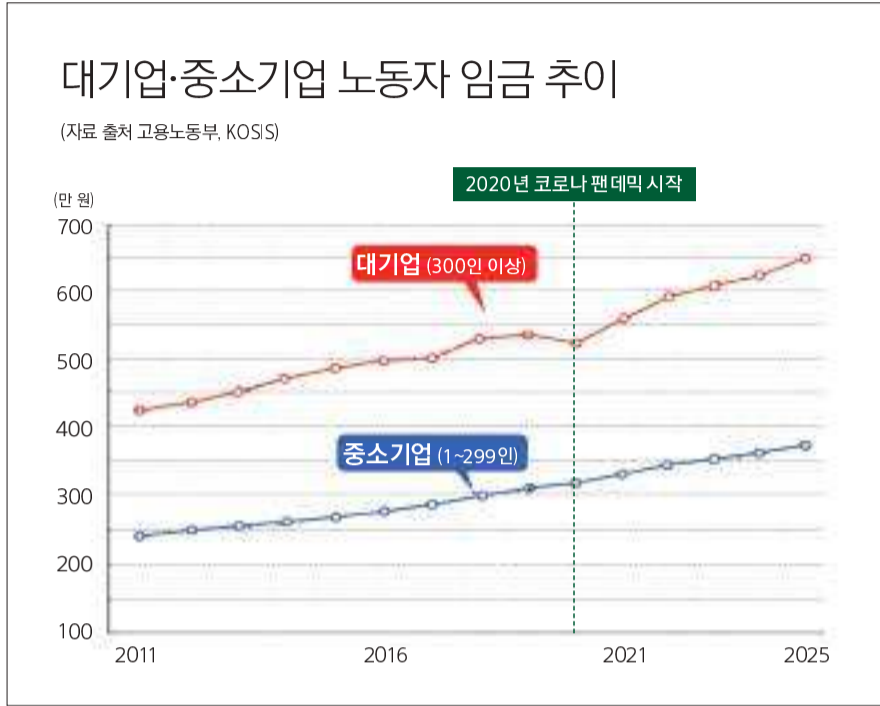
노동자들 간 격차는 자본 간 경쟁에서 유래한다

개별 노동자는 개별 자본가를 떠날 자유가 있지만, 자본가 계급 전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용돼 임금노동에 종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의존성 때문에 적잖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한다. 일부는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도 망한다고 투쟁의 한계선을 그으려 한다(“선 넘지 마라”). 또 다른 일부는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투자의 목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가치는 오직 살아 있는 노동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일손을 놓으면 이익 생산이 멈추는 이유다. 결국 자본은 개별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있어도,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본의 노동 의존성 덕분에 노동계급은 단순한 약자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로서 잠재력을 지닌다. 노동자 투쟁이 자본주의에 맞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함께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치면서도 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성인 자본 간 경쟁에 휘말린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경쟁은 시간적·공간적 불균등성을 낳는다. 지역·산업·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불균등성으로 인해 노동자 사이에서도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가 발생한다.

생산성 혁신에 투자할 자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만드는 경쟁 압력 등이 부문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에 투자해 경쟁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은 오른 노동생산성만큼 임금을 더 올려 줄 여력과 필요가 생긴다. 특히, 경기가 좋아 생산 증대 경쟁을 할 때는 노동력 확보 경쟁도 벌어진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그렇다.

지금 한국 제조 대기업의 자동화(생산성)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제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약 30~50퍼센트 수준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50~65퍼센트 수준이다. 생산성 격차보다 평균 임금 격차가 작은 것은 임금 수준 결정에 노동력 확보의 필요와 함께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도적인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그 뒤를 따르는 기업들에 임금 인상 압박을 주지만, 동시에 규모와 생산성 차이 때문에 그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 관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중

소기업을 위해 이윤을 양보하지는 않지만, 대신 그들은 한목소리로 대졸 초임(“청년들의 눈높이”)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중소기업 임금이 더 빨리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이처럼 자본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착취를 제고에 공통의 이해관계로 묶여 있듯이, 노동자들도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임금과 조건에 격차가 있어도 같은 계급으로서 연대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생필품부터 부동산까지 물가가 오르고 한때 금리도 크게 상승하면서, 일부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저하됐다.

노동계급 모두에게 실질임금을 방어하고 생활비를 충당할 이해관계가 있다. 삼성전자 임금 투쟁은 이런 보편적 필요의 일부였다. 그래서 삼성 투쟁의 성과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임금 격차 해소는 상향 평준화를 지향해야 한다

대기업 임금 인상이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단지 대기업 임금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결국 사회의 총부가가치 중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정해져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가정

의 실제 효과는 자본가들이 정해 놓은 선을 넘지 않는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개혁주의적 실천은 노조 상층 관료들이 파업 투쟁에 대해 부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나 경제적 파워가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를 위해 그 힘을 쓰는 것이 출발점이지, 그들이 자제한다고 해서 하청·협력 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투쟁 회피가 격차와 분열을 키운다.

대기업 임금 파업을 지지하지는 소수 좌파의 주장이 경제주의에 대한 추수이기는커녕 그것에 대한 의식적인 반대인 이유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 내 임금 격차가 없어질 순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를 해체하기 전까지는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임금 투쟁은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것에 맞서는 투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임금의 상승·하강 추세가 함께 움직인다 하더라도 고물가 등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이는 것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과제다.

그래서 노동계급 내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연대 투쟁이 될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상향 평준화는 결국 전체적으로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몫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몫을 더 늘리는 투쟁이다. 즉, 계급 대 계급의 투쟁이다.

이런 투쟁들이 보편화되면 막대한 기업 이윤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화해 싸우기도 더 쉬워진다.

노동계급 연대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연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좌파는 부문별로 파편화된 경제주의와 개혁주의 정치를 추수할 것이 아니라, 기업·성별·인종·국적별 경쟁 부추기기와 이간질, 차별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도록 노동운동 안팎에서 투쟁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정치적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경제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진 출처: 청와대

이재명 정부 1년

모자라고 보수적인 정치적 실용주의

실용주의의 장점은 불확실성 속에서 학습·수정·숙의를 거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숙의와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며, '국익·성장·안정'으로 수렴된다고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며,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응 TF(특별대책위원회) 가동을 약속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이념보다 결과, 진영보다 효용, 원칙보다 문제 해결을 앞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사전적 의미의 실용주의는 문제를 추

상적 원칙보다 실제적 방식으로 다루는 태도다. 이론이나 교리보다 당장의 결과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용주의에는 정치적 매력기가 있다. 경제가 어렵고 대중이 진영 논리에 피로감을 느낄 때, 또 기존 제도가 해결 능력을 상실했을 때 "쓸모 있는 것은 무엇이든 쓰겠다"는 선언은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타임(TIME)>지의 2026년 정치적 실용주의론도 미국 유권자들이 이념 전쟁에 치져 '실현 가능한 개혁'과 결과 중심 정치를 선호하는 흐름을 짚어낸다.

실용주의는 원래 그렇게 협소한가?

실용주의를 단순히 '원칙 없는 현실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현대 정치철학에서 실용주의는 논쟁적 개념이지만, 몇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오류 가능성, 반회의주의, 실천의 우선성,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인식적 단절 거부 등이 그것이다. 즉, 실용주의는 단순히 '당장 통하는 것'을 찾는 태도가 아니다. 모든 신념과 정책이 비판과 수정에 열려 있어야 하며, 실천 속에서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 위기 관리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실용주의의 요소는 반이분법, 오류 가능성 인정, 실험주의, 숙의로 요약된다. 바람직한 실용주의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기존 믿음을 바꿀 태세를 갖추고, 결정을 가설처럼 다루며, 이해관계자와 회의적인 목소리를 숙의 과정에 포함한다. 반면 실패한 위기 관리는 단 하나의 해법만 고집하고, 법과 원칙을 좁게 해석하며, 비판자를 배제하고, 결정을 확실성의 언어로 포장한다.

실용주의적 탐색은 다양한 관점과 근거에 열려 있어야 하며, 방법과 결론이 도전과 수정에 노출되어야 한다. 실용주의, 특히 존 듀이의 민주주의론은 이를 단순한 정부 형태를 넘어 평등주의와 열린 소통의 이상으로 정의한다. 듀이에게 민주주의는 시

민사회와 일터, 학교에서도 실현되어야 할 생활양식이다. 그는 1930년대 대불황 시기에 사회화된 경제를 지지하며 미국식 고전적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비판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부분적 실용주의에 그친다. 예산, 세제, 외교, 노동 정책에서 일정한 유연성과 조정 능력(가령 삼성전자 노동쟁의 등)을 보여 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긴축·감세·대결 노선과는 차별화했고, 노란봉투법 같은 일부 노동권 개선 조치도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시민·사회운동이 정책 형성의 공동 주체가 되는 듀이식 민주주의적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대체로 국가 엘리트와 관료, 기업, 전문가가 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을 그 목표를 수용하거나 보완하는 '이해관계자'로 초대하는 방식이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된다. 실용주의가 현실 데이터와 제도적 미세 조정을 통해 당면 과제를 관리하려는 기술적 접근에 매몰되면 상상력과 정의감, 정신적 깊이를 잃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기 쉽다. 특히 실용주의가 계급 지배와 제국주의 질서를 '현실'로 수용하는 순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실효성 없는 정치가 된다.

▶ 6면으로 이어짐

'실용'이라는 말의 매력과 함정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실용주의의 문제는 시작된다.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무엇을 위한 효과인가", "누구에게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질문을 동반한다. 실용주의가 이 질문을 회피하면, 그것은 원칙을 초월한 현실주의에서 더 나아가 아예 기존 권력관계를 자연스러운 전제로 삼는 기술관료적 처방이 된다. 실제로 20세기 실용주의는 종종 자유주의적 기술관료의 철학, 즉 사회적으로 승인된 협소한 목표를 유연하게 달성하는 데는 능하나 그 목표 자체를 비판할 자원은 빈약한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핵심 문제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원칙이 없는 정치라기보다 원칙을 '국익', '성장', '안정',

'통합', '기업 활력', '동맹 관리'로 이미 정해 놓고 그 목표 안에서 수단만 유연하게 바꾸는 정치다. 즉, 이재명 정부는 반이념을 표방하지만 실은 매우 뚜렷한 이념을 지닌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회복, 국가기구의 안정적 재건, 제국주의 질서 내 전략적 지위 상승, 사회갈등의 제도적 관리라는 이념이 그 실체다.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이재명이 너무 실용적이라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그의 실용주의가 충분히 민주적이지도, 계급적으로 독립적이지도, 국제주의적이지도 않다는 데 있다. 그의 실용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필요를 추구하는 민주적 실험이 아니라, 위로부터 국가와 자본의 위기를 관리하는 통치술이라고 할 수 있다.

▶ 5면에서 이어짐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정치 안정 실용주의의 한계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이후 출범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은 이 정부 정당성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내란은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내란 특검은 불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김용현 등 총 24명을 기소했다. 또한 윤석열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공수처·국수본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란 범죄의 진상을 어느 정도 규명했으나 한계도 명확하다. 대법원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2차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1차 특검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질서 회복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국가와 자본의 구조적 상호의존 탓에 대중적 민주주의 확장보다 사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한 질서 회복에 치중한 결과다. 내란 세력 척결은 단순히 일부 장성이나 정치인, 관료를 기소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군, 경찰, 검찰, 정보기관, 법원, 보수 언론, 재벌, 극우 네트워크가 민주적 권리를 어떻게 위협했는지 명확히 드러내고 처단해야 한다.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국가기구 정상화와 국정 안정이라는 틀 안에 가둬 왔다.

검찰 개혁에서도 같은 모순이 드러난다. 2026년 3월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이 신설되는 법적 절차가 10월 2일 마무리된다고 보도됐다.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 기능을 맡고,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검찰권 축소는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개혁이지만, 검찰 권한을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산하 수사기구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 확대에 이르지 않는다.

본지가 지적했듯이 1987년 이후 민주적 권리의 확대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억압 기구가 더 강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 특히 노동계급의 투쟁에 힘입은 결과였다. 검찰과 경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판 중심주의 강화, 참심제·배심제 등 평범한 시민의 사법 참여 확대가 진정한 개혁의 방향이다.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 강화 움직임은 민주적 권리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본지가 보도했듯이, 경찰청은 2026년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추진했다. 참여연대와 진보당은 검찰 개혁으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찰 권한까지 더해지면 거대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민주주의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내란 세력 척결을 표방하면서도 국가 억압 기구의 민주적 통제에는 소극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민중(국민의 대중)의 자발적 활동으로 보기보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 회복의 문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한 선거와 사법 절차, 기구 개편의 차원을 넘어선다. 민주주의는 파업·집회·조직의 권리, 전쟁 반대와 일터 내 발언권, 국가 기구 감시권 등을 포괄한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은 필요하나 제한적이며,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사진: 조은석 특검장

이재명식 통합 노동운동의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을 포섭해 갈등 관리하고 투쟁 예방하기

통합의 정치: 갈등 해소인가, 계급투쟁 관리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유용한 정책을 쓰겠다”는 말은 그의 정치적 브랜드가 됐다. 이 말은 윤석열 정권의 극단적 대결 정치 이후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통합의 정치는 언제나 계급적 질문을 낳는다. 누구와 누구를 통합하는가? 무엇을 위해 통합하는가? 통합의 비용(대가, 희생, 리스크)은 누가 부담하는가?

이재명 정부의 통합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상화와 한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지향한다. 내란 세력의 핵심은 배제하되 보수 관료, 기업, 군, 외교·안보 엘리트, 온건파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포괄해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본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을, 산업부 장관은 기업 편을 들어 내각 안에서 싸우라”고 했다. 노동부 장관마저 기업 편을 들면 노동자가 현장에서 직접 싸우게 되니 내각이 이를 대신하라는 뜻이다. 결국 노동운동의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을 포섭해 갈등을 관리하고 투쟁을 예방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통합은 마치 현실 정치의 성숙함을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 갈등은 단지 오해나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임금과 이윤, 안전과 비용 절감, 복지와 군비, 노동권과 경영권, 평화와 동맹 전략은 실제로 충돌한다. 이 충돌을 ‘국익’과 ‘통합’의 이름으로 봉합하면 결국 힘이 약한 쪽이 양보를 강요받게 된다. 그것이 ‘사회적 대화’가 반복해 온 역사다.

좌파는 통합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 노동자와 서민의 요구를 중심에 두는 통합인지,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통합인지 살펴야 한다.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통합인지, 아니면 국가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보수 권력기관을 온존시키는 통합인지 따져야 한다.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를 위한 통합인지,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통합인지도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통합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대체로 후자에 기울어 있다. 사회 모순을 정직하게 드러내 민주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국가의 조정 능력 안으로 흡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실용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 실용주의다.



트럼프에게 왕관 선물을 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해 한국 자본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용주의: 확장재정인가, 성장 국가의 복원인가

이재명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달리 적극적 재정 기조를 띠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본예산보다 8.1퍼센트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지역 투자와 국민 안전 강화에 집중하는 '슈퍼 예산'이라 설명했다. R&D 예산은 35조 3000억 원으로 늘었고, 국민 안전 예산도 확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경기 침체와 대중 생활비 위기 속에서 재정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 연구개발 예산 복원과 복지 일부 확대를 추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서민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수요를 보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넓히는 것은 긴축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조치를 단순히 폄하할 수는 없다.

'국민 성장'

그러나 예산 기조를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은 복지국가 전환보다 성장국가 재편에 가깝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분야는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전략산업, 방위산업이다. '민생'과 '미래'라는 수사를 결합했으나 그 중심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산업 경쟁력 제고가 자리잡았다. 재정 확대도 노동계급의 삶을 직접 개선하는 보편적 사회권 확대보다, 국가가 첨단산업 경쟁의 위험과 비용을 분담해 기업의 축적 조건을 보완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 같은 성격은 국민성장펀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금융위원회는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AI와 로봇,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 전환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산업정책이 공적 자금으로 위험을 사회화하면서 혜택은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집중시킬 우려

▶ 8면으로 이어짐

외교·안보 실용주의: 자주가 아닌 제국주의 질서 내 능동적 적응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국의 중심 실용외교'로 요약된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용주의라는 미사여구의 힘은 강력하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노골적인 이념 외교를 내세우지 않는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한편,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강화한다. 겉보기에는 균형과 실용을 두루 갖춘 외교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향점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 자본주의의 전략적 지위 상승이다. 2025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는 한국의 대미 투자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 경제·국가 안보 이익 증진 분야를 제시했다. 합의안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와 추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양해각서(MOU)가 포함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최대 15퍼센트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단순히 트럼프 정부에 끌려간 결과가 아니다. 본지가 강조했듯, 이재명 정부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 한국 자본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 했다.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마스가 프로젝트, 국방비 GDP 3.5퍼센트 확대, 전략권 환수 등은 이재명 정부가

능동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의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미국에 끌려가는 굴욕외교'라는 민족주의적 비판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하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한국 지배계급이 제국주의 질서 내에서 더 큰 지분과 군사·산업적 역할을 확보하려는 능동적 적응이다. 좌파가 진정으로 비판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단순히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제국주의적 경쟁 질서 속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아류 제국주의가 되려) 애쓰기 때문이다.

군비 증강

이 점은 국방예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66조 2947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5조 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폭이다. 본지는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국방비를 2025년 대비 8.2퍼센트 증액해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과 합의한 GDP 대비 3.5퍼센트 수준의 국방비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에도 대 규모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자주 국방', '스마트 정예 강군', '첨단 국방'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한다. 그러나 군비 증강은 복지와 노동자 안전, 공공의료, 돌

봄, 주거 등에 투입할 자원을 잠식한다. 또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한국을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확대는 '자주'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실상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와 맞닿아 있다.

한중 관계 개선도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하고 경제 협력을 모색하지만, 이는 평화주의적 정책이라기보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 외교에 불과하다. 본지는 이재명 정부가 대중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실용 외교'를 앞세워 자국 자본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좌파의 외교 기준은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국제주의여야 한다. 한국 자본의 수출 시장 개척이나 조선업 수주, 방산 수출,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노동자 등 민중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 노동자는 군비 증강 비용을 세금 인상과 복지 삭감으로 부담한다. 동아시아 노동자들도 군사적 긴장의 위험을 함께 떠안는다. 이재명식 실용 외교는 윤석열식 이념 외교보다 세련됐으나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노골적인 친미가 아니라 '자주적 국익'을 내세워 한미 동맹과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 7면에서 이어짐

가 크다는 점이다. 국가가 기술·인프라·금융 위협을 떠안는 대신 노동자에게 구조조정과 직무 전환, 고용 불안, 숙련 재편 비용을 강요한다면, 이는 대중의 삶 개선과는 무관한 대기업 이윤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 정책에 불과하다.

세제 개편에서도 양면성이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은 5년간 35.6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낼 전망이다. 대신 공약 이행 재원으로는 부족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핵심적인 부자 증세는 빠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조세 실용주의가 어디서 멈추는지를 보여 준다. 재정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부유층과 자산가에게는 충분히 과세하지 않는다. 복지를 강조하지만 자본

시장 활성화와 주주 친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 조세 정의를 외치지만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정면으로 겨냥하지도 않는다. 즉,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식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를 일부 되돌리는 데는 실용적이지만,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에 맞서는 데는 매우 비실용적이다.

좌파적 관점에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은 공적 재정을 투입할 때 그 대가를 공공 소유, 고용 보장, 임금 인상, 산업 안전 강화, 탈탄소 전환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용주의는 공적 자금과 산업 전략을 동원하면서도 대기업의 지배는 개혁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민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치우친다.



누구를 위한 실용? 해고에 직면해 농성하는 흠플러스 노동자들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노동정책: 개혁의 언어와 사회적 타협의 압박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 성과 중 하나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손해배상 남용 제한을 담은 이 법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핵심 조처다. 이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손배가 압류와 공권력 압박을 방치·조장했던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의 제도적 개선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개혁과 포섭이 결합된 양상을 띤다. 2026년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의제로 제기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AI 전환을 이유로 고용 유연성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유연성을 확장하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연히 노동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이런 방식은 익숙하다. 기업에는 유연성을, 노동자에게는 안전망을 약속하는 식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정책사에서 대체로 ‘유연성’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외주화, 성과주의, 직무급제, 전환배치 압박으로 현실화됐다. 안전망은 사후 보완책에 불과하지만 고용 불안은 즉각적인 현실이다. 노동자에게 고

용 유연성은 경제적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존엄의 문제다.

본지의 비판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하며 고용 유연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가 기업 측에 유리하게 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국익’ 논리를 수용하면 노동자도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감수해야 한다는 압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비판자와 회의론자를 포용해 노동자의 경험을 정책 형성의 핵심 자료로 삼는 것이 아니다. 경사노위식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정한 성장·경쟁력·고용 유연성 의제를 노동운동 지도부가 수용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장치로 전략하기 일쑤다. 노동자는 모색의 주체라기보다 양보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좌파는 개혁 입법을 지지하되, 그것이 사회적 대화를 빌미로 노동운동을 제약하는 장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기업의 비용 계산에 맞춰 노동자를 통제하는 행태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 집단적 힘을 중심으로 경제 재편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동정책은 계급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좌파적 대안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좌파가 추상적 원칙만 고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좌파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자본가에게 현실이 투자수익률, 관세, 환율, 수출 시장, 인건비, 규제 비용이라면, 국가 관료에게 현실은 재정건전성, 성장률, 안보 환경, 국제신용도, 동맹 관리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현실은 임금, 노동시간, 해고, 산재,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돌봄, 전쟁 위험이다.

이러한 현실 사이에 중립적 조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좌파적 대안은 첫째, 노동자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업과 구조조정이 문제라면 해고 유연성이 아니라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 동일임금, 공공일자리, 산업 전환 과정의 노동자 통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둘째, 재정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국방비와 방산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공공주택, 돌봄, 기후 대응, 산업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공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 넷째, 외교는 ‘한국 국익’이 아니라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국제 연대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주의는 검찰·경찰 권한 재배분을 넘어 국가 억압기구에 대한 대중적 통제, 집회·파업의 자유, 배심·참심 확대, 정보기관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대안은 기후·전쟁 위기와 불평등, 저성장, 인공지능(AI) 전환, 노동시

장 불안정 속에서 다수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처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기업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변화만을 다룬다. 반면 좌파적 대안은 노동자 등 서민의 생존 조건을 기준으로 사회·경제 조건들을 개선하자고 제안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무엇이 효과를 내는가’를 묻는다. 좌파는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효과인가’를 되물어야 한다. 그 효과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 권력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일 때 이재명의 정치적 실용주의는 진보의 언어를 빌린 체제 관리 전략이라는 본질을 드러낸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모두 ‘체제 내적 개혁’이다. 이러한 개혁은 노동자와 서민의 숨통을 일부 띄워 줄 수 있으나, 동시에 한국 자본주의의 재건과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에 종속된다.

그러므로 좌파의 결론은 명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용주의에 정치적으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 개혁적 조치는 지지하고 옹호하되,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내란 세력과 우파의 반동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이재명 정부의 자본주의적 안정화 전략에도 독자적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자 파업과 사회운동의 거리 투쟁, 반전·반제국주의 운동, 공공서비스 확대, 부자 증세와 군비 삭감 요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왼쪽에서 압박해야 한다.

삼성전자 투쟁이 불러온 임금 인상 요구 연쇄 확산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예고 한 시간여 전 사용자 측과 합의했다. 몇 주 동안 거의 모든 언론의 1면은 삼성전자 파업 관련 소식이었다. 실제 파업에 돌입했다면 노동자들이 가진 진정한 힘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용자 측과 정부, 언론이 전전긍긍한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투쟁을 보며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최근 사측에 원청과 같은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인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도 성과급 지급을 원청 직원과 차별하지 말라며 SK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예견된 바다. 소득 등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용돼 착취당한다'는 노동자들의 객관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한 부분의 노동자들이 싸워 성과를 얻으면 다른 부분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가 고임금을 받더라도 임금노동자인 이상 착취 관계에 놓여 있다. 그 관계에서 자신의 몫을 더 받아 내려는 것은 계급 투쟁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다.

반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청·비정규직과의 '사회적 연대'가 없다는 이유로 비판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인 노동운동 내 일부 좌파는, 정작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 투쟁



판교역 광장에 모인 카카오회 조합원들 — '사상 최대 실적, 성과급 인상하라'

에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 투쟁의 에스컬레이터 효과나 투쟁의 연대를 사실상 지난 시절 이야기로 치부하는 듯하다. 그래서 고임금 노동자가 자기 이익을 일부 양보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공상적이고 무기력한 주장을 해 왔다. 이들의 주장이 공상적이고 무기력한 이유는, 이익의 '이전'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유일한 수단인 노동자들의 투쟁과는 거리를 두면서 그저 사용자와 정부의 '선의'에게 촉구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용자들이 그 돈을 하청이나 다른 부문에 줄 거라면 애당초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에도 힘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대가 된다. 삼성전자 투쟁은 그런 잠재력을 언뜻 보여 줬다.

삼성전자 노동자 일부도 이런 파급 효과를 의식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회에서 한 발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삼성의 많은 계열사들과 그 외 협력사들은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계열사와 협력사들에게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 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및 협력사 나아가 국내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과급

한국의 기업주들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대신 성과급을 지급해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불만을 억눌러 왔다. 성과와 연동시켜 임금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고, 노동자들을 개인·팀별 실적으로 경쟁시켜 통제력을 유지하기 쉬운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성과급은 실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삼성전자 외에 다른 대기업에서도 많은 노동자가 '사측의 논리'를 이용해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싸워 왔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5월 20일 영업이익의 30퍼센트 분배를 요구하는 안을 사용자 측에 전달했다.(관련기사: '삼성전자발 성과급 투쟁, 현중 노동자도 30퍼센트 요구한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매년 영업이익의 30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요구해 왔다."(관련기사: '성과급은 특혜 아니다')

여기에 더해 노란봉투법 시행 두 달 만에 하청 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법적 환경의 변화와 삼성전자 파업이 주는 자극이 결합되면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운동이 활성화될 조짐이 있는 듯하다.

지배계급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연쇄 효과다. <조선일보>는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네이버, 카카오, 유플러스 등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N퍼센트 성과급' 요구의 빔장이 풀리기 시작했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경제 6단체가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수원지법이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 손을 들어준 것은 모두 같은 이유다.

장호종

웹사이트에서 '파업 찬성 표 던진 카카오 노동자들 — 역대 최대 실적에 임금 인상 요구' 기사도 보시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공개 토론회 영상
-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 ▶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7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미국은 왜 쿠바를 증오할까?

토마시 탱글리-에번스

도널드 트럼프가 석유 금수로 쿠바인들을 기아로 내몰고 있는 지금, 미국 제국주의와 쿠바 혁명, 현재 사회주의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핵심 질문에 답한다.

쿠바에 대한 미국 지배자들의 증오는 1959년 쿠바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혁명으로 미국이 지원하던 독재자가 타도됐고 외국 기업들이 국유화됐다. 또한 소련에 지원을 구하는 국가가 수립됐다.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쿠바를 다시 수중에 넣으려고 애써 왔다.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이 모든 주변국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국들을 미국 영토로 편입해 직접 지배하거나 예측적인 정부를 통해 간접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의 부와 자원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플로리다주에서 불과 1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정권이 있다는 사실에 특히 분개한다.

쿠바는 중남미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운동과 정부들에게 오랫동안 영감의 원천이었다.

예컨대 1979년 니카라과의 혁명가들은 미국이 지원하던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를 타도했다.

이때 그들은 쿠바 혁명가들이 사용했던 게릴라 전술을 일부 본받았다.

콜롬비아에서는 쿠바 혁명에 고무된 학생들이 민족해방군(ELN)을 결성해 미국이 후원하던 과두제에 맞서 싸웠다.

비슷한 게릴라 운동이 엘살바도르, 페루, 과테말라,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부상했다. 적어도 미국이 보기에 이 모든 저항 운동은 쿠바 때문에 생겨났다.

관타나모

쿠바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의 야욕은 1959년 혁명보다 훨씬 오래됐다.

19세기 쿠바가 아직 스페인의 식민지였을 때 미국 대통령 제임스 K 포크와 프랭클린 피어스는 쿠바를 사들이려 했다.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으로 미국은 쿠바를 군사 점령했다. 미국은 병력을 철수한 후에도 "쿠바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미국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입힌 쿠바 혁명의 지도자들. 피델 카스트로(맨 왼쪽), 체 게바라(왼쪽 세 번째)

미국은 쿠바에 해군 기지를 짓기 위한 토지 임대료를 강요했고, 그 결과 관타나모만에 미 해군 상설기지가 생겼다.

쿠바는 또한 독자적으로 다른 열강과 조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쿠바 혁명 전까지 미국 기업들은 쿠바에서 수도·전기·가스의 80퍼센트, 통신망의 90퍼센트, 광산업 대부분을 소유했다. 이 모든 상황이 혁명으로 바뀌었다.

1950년대에 부패하고 잔인한 통치자 풀헨시오 바티스타의 군사 독재는 쿠바를 부자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수도 아바나에는 고급 호텔과 카지노가 즐비했고 성매매가 성행했다.

그러나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이끄는 게릴라군이 바티스타 정권을 타도했다. 독재 정권은 삼시간에 무너졌다.

미국 지배계급은 이 혁명가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을 본받으려 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였다.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존 F 케네디는 쿠바에 가혹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고 금수 조치로 쿠바 정부를 고립시키려 했다.

1961년 케네디는 CIA가 훈련시킨 쿠바 망명자들을 피그스만에 침투시키고 공습을 지원했지만, 침공은 실패했다. 쿠바 정권은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버텨내며 지금까지도 미국 제국주의의 눈엣가시로 남아 있다.

쿠바 혁명의 성격은 무엇이었나?

카스트로는 중간계급의 한 층을 대변했다. 그들은 제국주의가 쿠바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고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1956년 카스트로, 게바라와 80명의 투사들이 바티스타 정권을 타도하러 멕시코에서 쿠바로 바다를 건넜다.

1959년 쿠바 혁명은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려 미국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줬고, 두말할 나위 없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일보 전진이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미국 제국주의와 꼭두각시 정권에 맞선 민족해방 혁명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이라면 노동계급과 빈민이 자신들의 민주적 조직을 세워 자본주의 국가에 맞서 권력을 차지하고 아래로부터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카스트로와 [그의 게릴라 조직] '7·26 운동'의 전략이 아니었다.

쿠바 혁명 운동 안에서는 승리의 전략을 놓고 정치적 전투가 벌어졌다.

'시에라'나 '라노'나 하는 논쟁이

었다. 시에라는 산악 지대에 있는 카스트로의 게릴라군을, 라노는 주요 도시 등지에서 노동자, 학생 등이 벌이는 더 광범한 운동을 의미했다.

두 운동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변화의 동력을 제공할 것인가?

카스트로와 게바라는 게릴라군이 변화의 동력이고 사회 운동은 보조적 구실만 할 뿐이라고 봤다.

1950년대 후반에 쿠바 노동자들은 바티스타의 잔혹한 탄압과 정권과 한패인 노조 관료에 맞서 인상적인 투쟁을 벌였다.

처음에는 소규모 노동계급 투사들의 모임에 불과했던 세력이 비공인 파업을 조직하고, 지하 신문을 발간하고, 1958년에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대중행동보다 게릴라 전략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쿠바에서 일어난 민족해방 혁명은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줬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일보 전진이었다. 그러나 게릴라들이 대중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은 것이었지, 노동계급 대중 자신이 권력을 잡은 것은 아니었다.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트럼프가 강화한 미국의 금수 조치는 쿠바인들을 끔찍한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다

쿠바는 사회주의인가?

1959년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961년이 돼서야 카스트로는 1959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었다고 소급해서 규정했고 쿠바는 소련 진영에 가담했다.

왜 바뀐 것일까? 쿠바 혁명은 미국과 스탈린주의 소련이 제국주의 대결을 벌이던 냉전 와중에 일어났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가 권력을 차지한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이후 혁명의 물결이 유럽으로 확산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던 러시아 노동계급은 1920년대에 제국주의의 침략이 수반된 내전을 겪으며 거의 전멸했다.

러시아 혁명

소비에트가 꺾이기만 남은 상황에서 볼셰비키는 거대한 국가 관료 기구를 떠안았다.

이 관료층의 힘이 커졌고 점차 이오시프 스탈린이 이들을 주도하게 됐다. 이 관료층은 자신만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1928년 제국주의적 압박과 내부 위

기의 결합이 낳은 압력 속에서 스탈린이 첫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의 목표는 노동계급을 쥐어짜 급속한 산업화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의 결정적 전환을 의미했다.

소련의 지배 관료들은 서방 기업의 자본가들과 비슷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군사적·경제적 경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노동자들을 착취해 자본을 축적하고자 했다.

이 스탈린주의 지배 체제는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동유럽 너머로 그 무대를 확장했다.

일례로, 1945년 소련은 모로코 탕헤르 식민 정부에 참여하려 했고, 리비아를 식민지 삼으려 했다.

그러면서도 소련은 반제국주의 세력처럼 행세했다. 냉전기 후진국에서 일어난 여러 민족해방 투쟁들은 소련 국가자본주의를 민족 발전의 본보기로 여겼다.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에 직면한 쿠바는 갈수록 스탈린주의 소련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다. 쿠바 역시 사회의 우선순위가 자본 축적에 따라 결정되는 국가자본주의 사회가 됐다.

쿠바 정권은 여전히 지지받는가?

오늘날 쿠바 국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기초적인 필요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1959년 이래 계속된 봉쇄가 가혹해진 탓이다. 하지만 쿠바 국가자본주의 관료의 정책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쿠바 정권은 복지를 축소하고, 경제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관광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

쿠바의 현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동안 국가자본주의 관료들은 대택에서 살고 있다. 디아스카넬은 경제의 더 많은 영역을 민영화했고 그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런 정책은 불만을 낳았고 2021년 여름 빈민들의 시위로 이어졌다.

쿠바 빈민 시위는 라틴아메리카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긴축과 신자

유주의에 항의하는 더 광범한 패전의 일부였다.

본지는 국가자본주의 관료에 맞선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이 그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쿠바에서 정전 때문에 벌어지는 반란은 미국이 쿠바의 목줄을 죄면서 빚어지는 절망의 산물이다. 쿠바 정권이 석유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으로 내파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도 진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부 관료들, 정권과 연줄이 있는 민간 자본가들이 미국 및 다국적기업들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런 협상은 제국주의에 승리를 안겨 줄 뿐이다.

출처 Tomáš Tengely-Evans, 'Trump v Cuba: The US empire strikes back' (2026. 5. 24) / 번역 김종환

▶ 관련 기사 12면: “다음 차례는 쿠바”? 미국은 쿠바에서 손 떼라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부산/울산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혼돈의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일시 5월 30일(토) 오후 3시

장소 부산 하이텐 스타디움 3층 a-sm강의실 (서면역 1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이원웅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공저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부산/울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다음 차례는 쿠바”?

미국은 쿠바에서 손 떼라

미국이 쿠바를 더한층 위협하고 있다.

5월 20일 미 법무부는 쿠바 전 국가 평의회 의장 라울 카스트로 등 5인을 기소했다. 1996년 ‘형제 구조대’의 ‘민간’ 항공기를 격추한 테러 혐의다. 하지만 그 사건은 민간인 살해가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공격에 대한 자기 방어(정당방위)였다.

‘형제 구조대’는 CIA가 훈련시킨 쿠바계 우익 단체다. 이 단체는 1990년대 초 기관포를 장착한 소형 보트로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호텔을 포격해 악명을 떨쳤다. 당시 그 작전을 지휘한 호세 바술토는 자신들이 “CIA 기지에서 기관포 사용법을 훈련받았다”고 대놓고 말했다.

5월 21일에는 쿠바 민간/군부 합작 기업 경영관리그룹주식회사(GAESA)의 고위 경영진 아디스 모레라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쿠바계 마피아 가문의 일원이다)가 직접 체포를 지시했고, 이를 이민 세관단속국(ICE)이 집행했다.

그 직후 트럼프는 “60년 동안 방치됐던 쿠바에 내가 군사 개입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루비오 역시 기자회견에서 “평화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현 상황은 미국이 1월 초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하기 직전 상황을 연상시킨다.

그 침공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로드리게스 정부가 미국에 협조적이 돼, 쿠바 소비량의 65퍼센트에 달하던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쿠바 에너지 장관 비센테 레비는 이 봉

쇄로 “쿠바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완전히 동났다”고 5월 13일 밝혔다.

에너지 봉쇄와 결합된 해상 봉쇄 강화로 쿠바 사회는 백적간두에 서 있다. 쿠바인들의 처지는 급격히 악화돼, 일부 국가가 한두 차례 보낸 지원만으로는 기근과 전염병을 진정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봉쇄로 인한 굶주림과 경제 파탄,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으로 쿠바 곳곳에서 폭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폭동은 지난주 수도 아바나까지 번졌다.(관련 기사 본지 582호 ‘쿠바 혁명가들이 말하는 봉쇄와 정전 속의 삶’)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그 협조자들의 쿠바 압박·위협 일체에 반대한다. 그리고 쿠바인들에게 충분한 인도적 지원이 즉각 제공되기를 바란다.

쿠바 국가가 지금 미국의 봉쇄·압박으로 붕괴된다면,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승리를 뜻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맞서 중남미 장악력을 재확립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적 계획에 순풍이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쿠바에서 성공을 거두

면 이란 전쟁에서 입은 정치적 타격을 일부 추스를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쿠바 국가 붕괴는 중남미를 ‘뒷마당’으로 여기는 미국 제국주의의 오랜 숙원이다. 미국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쿠바를 응원한다.

쿠바 국가는 1959년 친미 독재자를 몰아낸 혁명 지도자들과 그 후계자들로 구성된 관료층이 운영한다. 당시 권력을 잃은 민간 자본가들은 미국 마에미로 도피했다.

새 쿠바를 지도한 피델 카스트로는 섬나라 쿠바가 미국의 봉쇄에 맞서 살아남으려면 소련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1961년 국가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했다.

소련 붕괴 후 쿠바 정권은 긴축과 민영화를 통해 독자적 자본 축적을 도모하는 한편, 특히 2000년대 중남미 ‘핑크물결’ 좌파 정부들, 특히 산유국 베네수엘라와의 교호에 크게 기댔다. 최근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정부의 석유 공급

중단이 쿠바에게 치명타가 된 이유다.

그 교호 덕에 쿠바는 1990년대 “고난의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 기간에 라울 카스트로가 세운 민간/군부 합작 기업 GAESA는 쿠바의 관광·금융·전력 산업 대부분을 운영하며 정부 1년 세입보다 많은 수익을 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중의 소득과 영양 수준은 계속 하락했고, 실업이 늘었다.

쿠바의 사례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약소국 정권은 자본 축적의 필요를 위해 노동계급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이번 위기 전부터 쿠바 대중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에 냉담해져 왔고, 정부는 그런 불만에 탄압으로 대응했다. 2021년 쿠바인들의 반긴축 저항은 그 최신 사례다.

그러나 쿠바 정권에게는 이란처럼 (대중 지지 없이) 미국과 비대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지 않다.

중남미 몇몇 국가들과 러시아·중국 같은 ‘반미’ 국가들은 기껏해야 말로만 미국을 규탄할 것이다. 미국에 맞서 일회적·상징적 지원 이상으로 쿠바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쿠바를 위한 해결책은 1959년 혁명 때 가지 않은 길에 있다. 바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투쟁으로 제국주의 질서에도 도전하는 과정에서 쿠바 대중이 일체의 억압에서 해방될 길이 열릴 수 있다.

김준호



미국이 쿠바를 더한층 위협하고 있다. 최근 쿠바 앞바다에 배치된 미국 항모전단

▶ 관련 기사 10~11면

‘미국은 왜 쿠바를 중요할까?’